

국회·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낮추나?

기존 25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 등 골자... 민주 윤준병 의원 '청년 참정권 확대법'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은 11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하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선거의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의 10%를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참정권 확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18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거권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논의 과정 속에서 피선거권의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 중 30세 미만 국회의원이 2명, 40세 미만 국회의원이 13명으로 청년의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년취업·주거·결혼·입신 및 출산 등 사회적 의제로 지리 잡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정치

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청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0세로 하향하여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지방의원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 청년에 대한 후보자 추천 할

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國民主權)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라며 "지난 2019년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선거권이 하향되는 과정 속에서도 정작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고 있어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함께 현재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당장제처럼 청년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후보자 추천 할당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청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이 2년간 의정비(의정활동비+수당) 전액 1억2,000만 원을 무주군 장애인복지시설 6곳에 기부했다. 사진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민과의 약속 지킵니다'

황의탁 도의원, 의정비 1억2000만원 무주 복지시설 기부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무주)이 2년간 의정비(의정활동비+수당) 전액 1억2,000만 원을 무주군 장애인복지시설 6곳에 기부했다. 황의탁 의원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과 직업훈련용 컴퓨터 구입 등에 써달라"며 전북복지재단에 무주군 지회에 4,100만원, 무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3,500만원, 반디누리작업장에 2,800만원, 무주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600만원, 무주 수어통역센터에 500만원, 하은의집에 500만 원을 전달했다.

황의탁 의원이 의정비를 기부하게 된 것은 전북도의회에 출마할 때 했던 당선되면 의정비 전액을 무주군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2019년에 1년간 모은 의정비 5,000만원, 이번에 2년간 모은 의정비 1억 2,000만 원을 기부함으로써 무주군 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황의탁 의원은 "도의원 출마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실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부금이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하천 침몰 미허가

불법영업 처벌 강화

민주 김윤덕 의원

'청정계곡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1일 국민들에게 청정계곡을 돌려주기 위한 하천 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하천의 침몰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은 침몰, 불법 사용한다에 대한 처벌을 하천법, 소하천법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침몰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계곡을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하여 매년 행락철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칫해서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하천의 우수배제 기능이 저하되는 등 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에도 계속 하천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불법영업을 뿌리 뽑는 데는 역부족이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 계속 하천에서의 불법영업, 불법구조물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하천과 계곡은 본래 국민 모두의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 모두에게 하천을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이 지난 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도민 먹거리 기본권 실현 제도적 기반 마련

국주영은 도의원, 조례 제정 공청회... 먹거리 위원회·상설숙의기구 운영 등 쟁점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3월에 1차 공청회를 실시한 데 이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조례안을 가지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학교급식 관계자, 행정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는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통합 추진체계(안)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먹거리 기본법(안)'의 목적, 원칙, 종합계획, 추진체계 등에 근거한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국주영은 의원의 진행하에 조례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특히 먹거리 위원회와 먹거리 상설숙

의기구 운영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됐다.

국주영 의원은(남원·더불어민주당)은 "먹거리 기본법(안)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조례안이 마련됐으나, 실효성 있는 먹거리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도지사·교육감·민간위원회를 3명의 공동위원장을 실제 참여가 가능한 부지사·부교육감 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도민들로 구성된 먹거리 상설숙의기구 설치에 전라북도 실정에 맞게 임의조항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박희자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먹거리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을 제외한 도지사·교육감 2인 공동위원장을 제안하며, 도민대표 100명 이내로 구성된 먹거리 상설숙의기구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먹거리 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녹색연합 이세우 공동대표는 "전라북도가 수립한 '전북푸드플랜'의 내실있는 실행과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엇보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민간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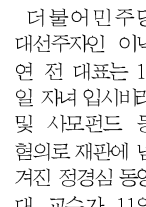
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먹거리 위원회와 먹거리 상설숙의기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영양교사회 백진순 회장은 "먹거리 정책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학교급식의 경우,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도내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고 안전한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규모 학교를 배려한 현실성 있는 급식비 지원도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먹거리 기본 조례는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먹거리 기본권 개념을 토대로 제정되어야 한다"며, "주요 쟁점이 된 먹거리 위원회와 먹거리 상설숙의기구에 대해서는 이후 몇 차례 실무진 협의를 거쳐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정경심 교수 항소심, 형량 정해놓고 내용 끼워 맞춰"

민주 이낙연 전 대표,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재야 입시버티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는데 대해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춰대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관에 저명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권한 한 가지를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며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정 교수의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재판부와 유선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입장을 가장 먼저 냈다. /뉴스

"지역 거점 국립대, 5년 안에 무상화 시행"

민주 이낙연 전 대표 "반값 등록금 지원 합쳐 1년에 1조원 정도"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5년 내에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분야 첫 번째 공약으로 지역대학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적극적 투자로 지역 거점 국립대의 수준을 높이는 '포용적 상향 평준화'가 핵심이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연 1700만원"이라며 "연·고대 평균인 2700만원대로 높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여권·회계 분야 등에 실무 교육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기존 학위제도와 달리 자기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나노디그리 제도다.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58만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학과와 정원을 조정한다.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를 공정으로 포장하며 그 경계를 넘지 못하는 청년을 좌절시킨다"며 "지역대학에 입학해도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고,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출발선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경제, 일자리, 산업, 사회, 교육, 문화의 발전과 지 위함이고 있다"며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도시가 살아난다. 지역대학을 살리는 일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회계 후 기자들과 만나 등록금 무상화 관련 예산추계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반값 등록금 교육비 지원을 합쳐서 1년에 1조원 정도면 될 것"이라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

기본소득국민운동

군산본부 15일 출범식

군산근대교육관에서 오는 15일 '기본소득국민운동 군산본부 출범식'이 개최된다. 출범식은 1부는 군산본부 구성 경과보고 인사 말씀, 축사, 출범선포식 등으로 진행되고, 2부는 기본소득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도민들을 위해 출범식 당일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라이브 방송으로도 송출된다. /뉴스

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상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들에 "공통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어 오늘 재판은 이상적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라고 불렀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은 "이의 없다"며 동의했다.

이날 재판은 이스타항공 재무팀 직원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이뤄졌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에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여억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

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물려 받은 포로 해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인 아남에도 당원 혐의 등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뉴스